

# 전남도 도로 공사 때 방치한 토사 폭우에 흘러내려 피해 키워

## 5명 목숨 잃은 곡성 산사태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민 5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은 당국의 안일함이 사태를 키운 '인재' (人災)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사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이 발령되는데, 곡성에 산사태 취약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호우를 대비해 도로 포장공사로 발생한 토사에 대한 안전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 포장공사를 위해 도로와 야산에 쌓아놓았던 토사가 빗물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흘러내려 참사로 이어진 점을 들어 주민들 사이에서는 산사태 예방 조치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중호우 예보·산사태 위기경보에도, 안전조치 없어=9일 전남도와 곡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께 곡성군 오산면 성덕마을 뒷산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주택 4채가 매몰됐고 주택 내부에 있던 주민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일대 주민들은 마을 위쪽에서 진행중인 국도 15호선 도로공사를 산사태 야기 주변으로 봤다. 집중호우가 예보됐고 산사태 위기 경보가 내려졌음에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전남도는 고흥·보성·순천·화순·곡성·담양으로 이어지는 국도 15호선 (168.4km) 공사의 하나로 이 일대 마을 위쪽에서 굽은 도로를 펴는 직선화 공사를 진행해왔다.

## 산사태 '심각' 단계 발령 불구

### 당국 아무런 안전조치 없어

### 전남도 취약지역 포함도 안돼 도로관리사업소는 은폐 급급

성덕마을 주민 김모(52)씨는 "전형적인 인재"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씨는 "도로 공사를 위해 상당한 양의 흙을 두 달간이나 산 비탈면에 쌓아놓았다"면서 "장맛비와 집중호우가 예보된 뒤에도 방수포로 덮어 씌우는 등의 산사태 예방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산사태 '심각' 경보가 발령되고 집중호우가 예보되는데, 곡성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산사태 취약지역이 많은데도 대비에 소홀했다는 게 주민들 지적이다.

사고 발생 지역은 전남도가 꼽은 '전남 2361곳의 산사태 취약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연히 곡성 산사태 발생 하루 전 이뤄졌다는 전남도의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전남도의 '산사태 취약지' 점검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위험도·붕괴가능성·면적·잠재적위험요소·피해가능성·지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점수를 매겨 정해진다. 이번 사고 지역은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산사태 취약지역은 아니라는 것이 전남도의 해명이다.

◇"도로공사로 쌓아놓은 토사가 사고 키

워"=도로공사로 쌓아놓은 흙이 빗물 무게를 견디지 못해 흘러내렸고 이 과정에서 오랜 비로 약해진 주변 흙까지 합쳐져 마을로 쏟아졌다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마을주민 양모(82)씨는 "오랫동안 도로와 산비탈 등에 흙을 그대로 쌓아놓으면서 공사가 진행중인지, 중간에 멈춘 것인지 모를 정도로 방치해놓았다"면서 "주민들은 비가 내리면서 매일 불안에 떨었다"고 말했다.

전남도도 "자연사태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아니다"고 언급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로 위에 있는 토사가 폭우로 흘러내려 국도 15호선 도로공사 지점부터 (산사태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사고는 자연사태의 원인에 의한 산사태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시작했다는 게 전남도 산림보전과측입장으로, 주민들 주장과 비슷한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책임론이 불거지자 공사를 맡은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관련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으면서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도로관리사업소는 해당 부지 내 쌓여있던 토사량·토사 위치·사업개요·예방 조치 등에 대한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측은 "공사 과정에서 토사로 옹벽 등 일부구조물을 쌓아 두긴 했지만 마을에서 500m가량 떨어진 도로 사면 일부가 유실된 것이 마을을 덮칠 산사태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도로관리사업소측은 또 "곡성 인근은 화강암암도 지반이 많아 원래 산사태 취약지역이 많은 곳"이라면서 "원래 지반이 약해 산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오후 곡성군 오산면 한 마을 뒷산에서 산사태 발생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이 무너져 있다. 전남 발생한 산사태로 5명이 매몰돼 5명이 사망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비 그친 뒤 산사태 위험 커져=산림 전문가들은 집중호우가 멈췄지만 태풍 영향으로 토 비 예보가 내려졌고 이미 많은 양의 비가 지반에 스며들면서 지반이 약해져 안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당장, 이번 폭우로 곡성에서만 17곳에서 토사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했고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담양군

무정면에서도 산사태가 발생, 주택 4채가 파손되는 등 산사태가 잇따랐다. 광주·전남에 지정된 '산사태 취약지역' 뿐 아니라 우려되는 급경사지 등에 대한 전수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광주지역의 경우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75곳이 지정된 상태다. 전남도는 경북·강원 다음으로 많은 2361곳을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산사태 취약지역에만 928개 마을이 들어 있으며 6052명이 살고 있다. 위험도가 높은 A·B등급만 2360곳에 이른다. 곡성에서만 산사태 취약지가 203곳으로 22개 시·군 중 순천(265곳), 화순(227곳) 다음으로 많다. /정병호 기자 jushb@ /곡성=김민석 기자 mskim@

# 민주당 전대 흥행, 잇단 악재에 '빨간불'

## 코로나·지지율 하락에 물폭탄 시·도당 대의원 대회 연기·취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전대 흥행을 이끌 어내지 못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집중호우는 새로운 악재를 만나 '주목 받지 못한 전당대회'로 기록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군이 전대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최근에는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데다 집중호우 여파로 호남지역 대의원대회도 잇따라 취소됐다.

민주당은 9일 "전날 광주와 전남에서 연달아 시·도당 대의원대회를 열고 8·29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출마자 합동연설회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집중호우 피해 대응을 위해 일정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9일 전북 합동연설회 일정도 예정대로 치러지지 못하게 됐다.

허윤정 대변인도 서면논평을 통해 "이해찬 대표는 정부에 수해 대책을 긴급히 수립해 시행할 것을 요구했고, 당도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지시했다"면서 "곡성에서 산사태로 3명이 희생되고 2명이 매몰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민주당은 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당국, 지자체와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단 오는 29일 치러지는 전당대회 본행사 일정은 변동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대까지 스케줄이 촘촘해 대의원대회 일정을 다시 잡기가 쉽지 않지만, 건넌될 수도 없다"며 "이르면 내주 합동연설회를 재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폭우 탓에 현장 일정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데다 TV토론회에 대한 인지도 시들해지고 있다. 당 대표 경선의 경

우 이낙연 의원의 '대세론' 속에서 진행되다 보니, TV토론회도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최근에는 2~3위 후보간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당대회가 주요 이슈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의 경우 그동안 말을 아꼈던 '조용한 경선' 분위기를 유지했고, 김부겸 전 의원과 박주민 의원도 별다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최근 김 의원의 행정수도 관련 이 의원의 과거 부정적 발언과 대표 임기 문제를 집중 공격하고 있지만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또 박 의원의 미래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파장은 미미하다.

그나마 최근 이 의원을 비롯한 당권 후보군이 '정권 재창출'을 강조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마저도 추락하는 당 지지율 속에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광록 기자 kroh@

# 이낙연, 당대표 경선 앞두고 전남도 현안 청취

## 전남도청서 김영록 지사 만나 의대·공공기관 이전 등 논의

오는 29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둔 이낙연 전 총리가 지난 7일 전남도청을 찾아 김영록 전남지사와 만났다. 민선 6기 전남지사를 지낸 바 있는 이 전 총리는 이날 김 지사와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해결 방안을 고민했다. 수도권은 물론 영남권, 충청권에 비해 낙후·쇠퇴·인구 감소에 허덕이고 있는 호남권에 대한 정부·여당의 획기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전 총리와 김 지사가 향후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김 지사가 이 전 총리에게 건의한 현안은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그린 뉴딜 전남형 상생일자리 추진 ▲차세대 대

형 원형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 ▲광양항 활성화 기반 구축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혁신공항 조기 건설 ▲지방 재정분권 관련 개선 건의 ▲환경공대특별법 제정 등 8건이다. 전남도가 안고 있는 핵심 현안으로, 해결 여부에 도민들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먼저 김 지사는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전남은 지역이 광활하고 의료 취약지역이 많아 100명 이상의 의대 정원을 배정하고, 동·서부권 모두에 대학병원과 강의캠퍼스를 각각 설립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정부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 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해상풍력 공동접속 설비, 지원부두와 배후단지 조성의 예타면제와 RE100 전용산단 등 기반시설의 국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차세대 대형 방사광가속기는 호남권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나주에 추가 설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서도 "1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인구와 산업 등 수도권 솔림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2차 공공기관 대상을 공공연구기관, 이전 공공기관 소속 투자·출자기업, 금융기관까지 확대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공공·행정기관 격차를 감안해 한국마사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난방공사 등 전남 유치 희망 30개 기관을 우선 배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전공대와 관련해 "2022년 3월에 정상 개교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과대학교 특별법'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전 총리는 "당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weeks**  
고함양 고도도 레티놀 분기형  
필사 주름 전용 단 2주만에 개선

IOPE LAB

## 슈퍼레티놀 단 2주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 IOPE

\*인·40~50세 성인 여성 대상(조사 2019.08.16~10.17 10명) | 피부임상연구센터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